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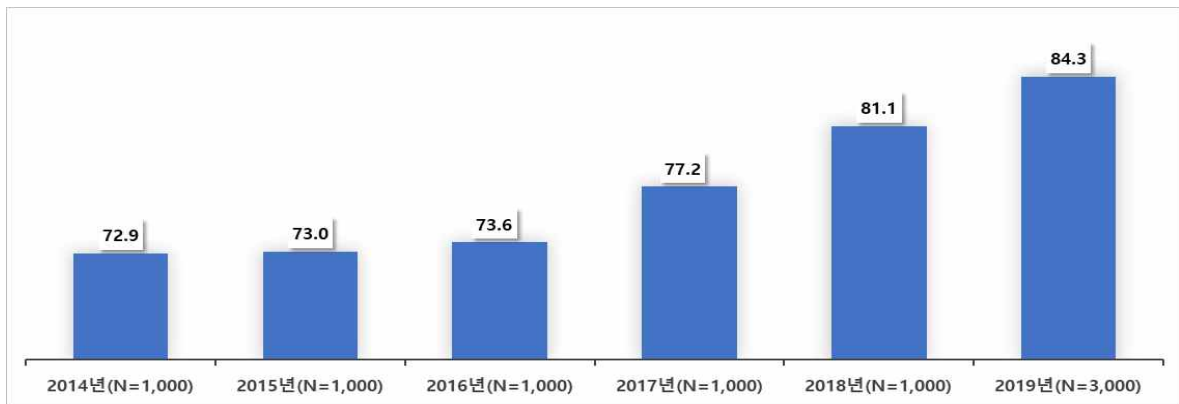
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[요약]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도

-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, 들어 봤다 등의 제도 인지 응답은 84.3%로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인지자들은 주로 'TV, 라디오,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'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
-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율은 2018년의 81.1% 대비 3.2%p 상승하였으며, 공단의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2014년 이후 제도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
[그림 1]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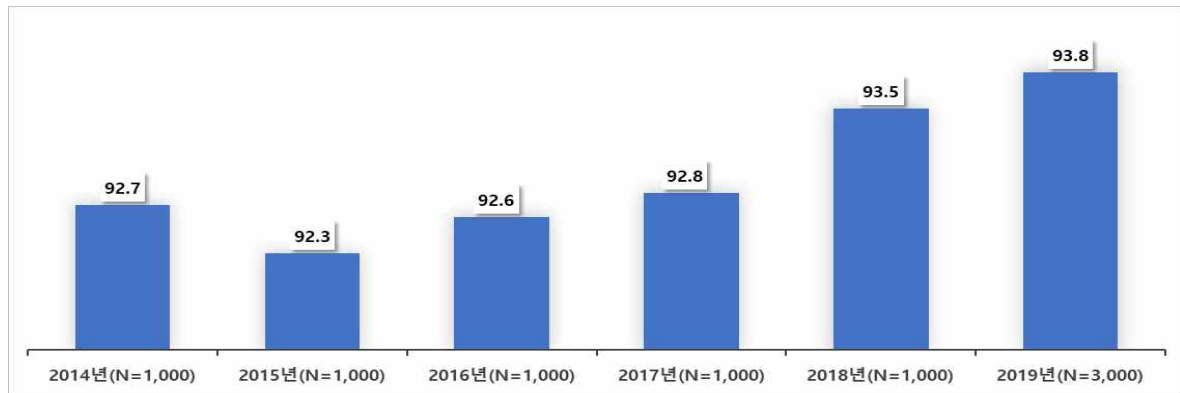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'동의한다'는 응답이 93.8%로 매우 높으며, 성별, 연령별, 거주지역별 등 모든 변인에서 큰 차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매우 높음
- 2018년 조사 결과 대비 상승의 폭은 크지 않지만(0.3%p), 국민들의 제도 필요성 공감대는 매우 큰 상태이며 2015년 이후 계속 향상되고 있음

[그림 2]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성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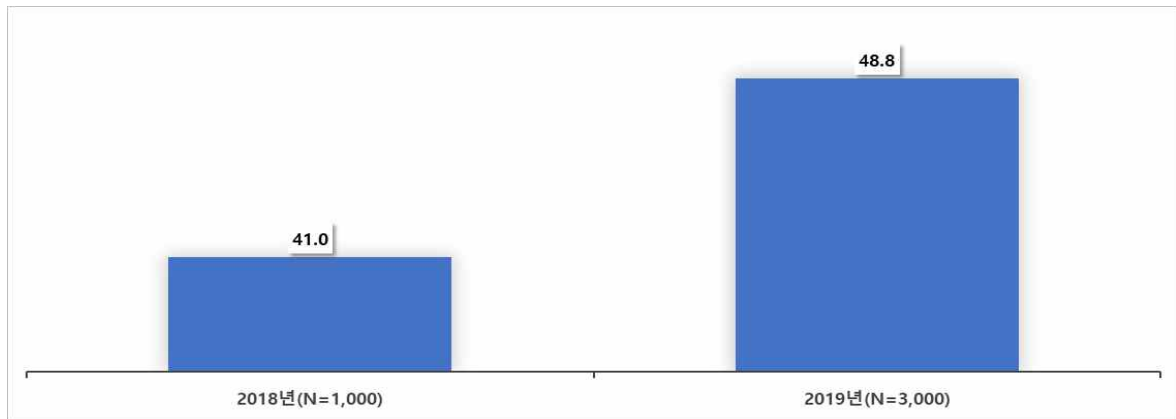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올해 처음 추가한 질문인,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**82.6%**가 **‘도움이 된다’**고 응답하여, 국민들은 제도 목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또한,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우선 필요한 사항(2가지 응답)으로 **41.3%의 응답자가 ‘본인부담금 완화가 필요하다’**고 꼽았고, 다음으로 **‘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’(32.7%)**, **‘장기요양 대상자 확대’(28.0%)**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, 본인부담금 완화와 가족 대상으로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한 국민들의 부양부담 완화 욕구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
-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 요구되는 서비스(2가지 응답)에 대하여 **‘방문요양·방문간호·주야간보호 등의 통합재가 서비스’라는 응답이 47.1%로 가장 높았고**, 외출·병원방문 등을 돕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차순위로 응답하여, 현재 일반 국민들도 통합재가급여의 제도화, 이동지원 서비스의 급여화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됨
-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함께 부과된다는 사실을 **‘알고 있다’는 응답이 48.8%로 나타난 반면**, 아직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관련 체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- 다만, 전년 41.0% 대비 7.8%p 높아져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[그림 3]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방식 인지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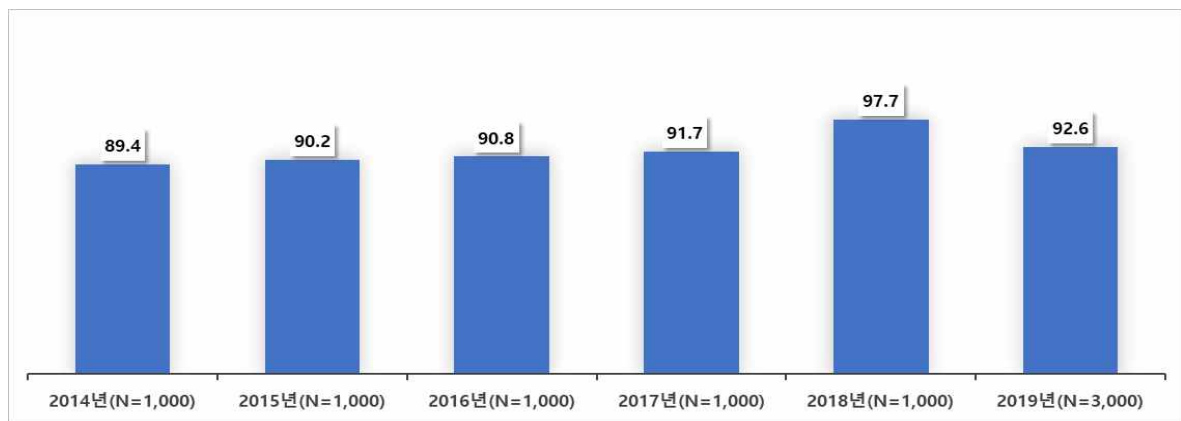
- 수급자 확대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'찬성한다'는 응답이 40.1%로,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장기요양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(복수 응답)에 대해서 '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및 수급자의 부정수급 관리를 통한 누수방지가 필요하다'는 응답이 50.1%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 국고지원금 확보, 국고지원을 인상, 보험료 인상 순으로 응답하여 국민들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입 확충보다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2.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

-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를 ‘이용해본 경험이 있다’는 응답이 15.7%로 나타남
- 본인이나 가족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다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‘이용할 의향이 있다’는 응답이 92.6%(2,779명)로 매우 높았으나, 2018년 97.7% 대비 5.1%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

[그림 4]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의향 추이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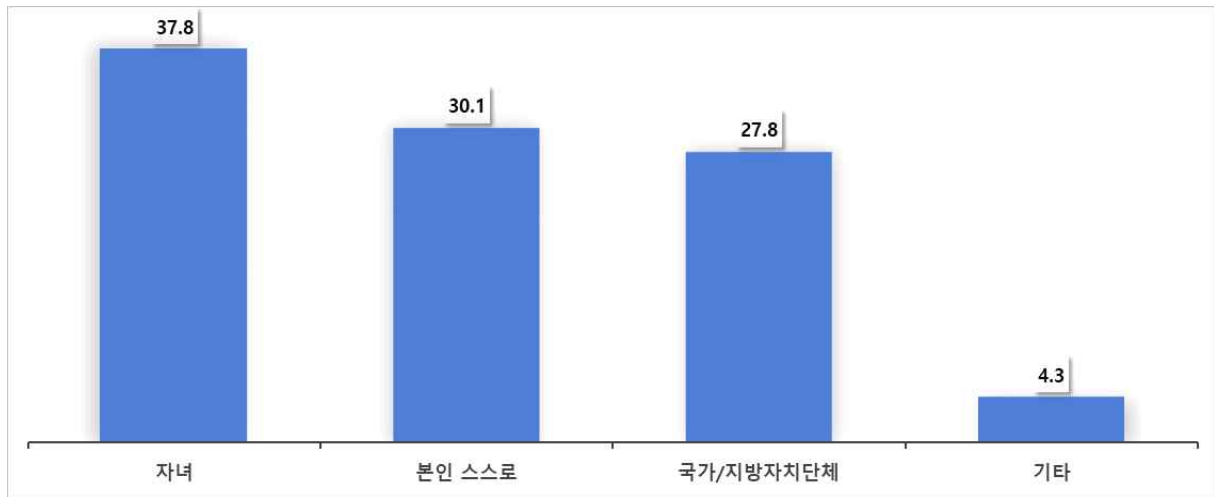


- ‘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 의향’이 55.5%로 ‘요양 시설 입소 등 시설 서비스 이용 의향’ 44.5%보다 높게 조사되어, 본인이 평소에 거주하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됨
- 반면,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는 응답자(221명)가 밝힌 주된 사유를 보면 ‘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수발을 맡길 수 없다’는 응답이 34.4%로 가장 많았고, ‘요양 서비스의 품질을 믿을 수가 없어서’가 30.7%, ‘본인 부담 비용이 비싸서’가 15.5%로 그 뒤를 이었음

3. 고령화 사회 대비 인식

[그림 5] 노부모 부양책임자(전체)

(n=3,000, 단위: %)



- 노부모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‘자녀에게 있다’는 응답이 37.8%로 가장 높았고, ‘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’는 응답이 30.1%, ‘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’는 응답이 27.8% 순서로 나타났으며, 성·연령·월 평균 가구소득 등 변수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음
- 자녀의 부모 노후생활 책임 정도에 대해서 ‘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 책임져야 한다’ 및 ‘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을 때 책임져야 한다’는 응답이 각 23.8%, 23.7%로 비교적 높았으며, 다음으로 ‘부모가 원할 경우’, ‘부모의 건강·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음’ 등의 순으로 나타나, 이는 ‘부모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’는 12.0% 응답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은 자녀가 부모의 노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
-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‘노인근로자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’는 응답이 37.8%로 가장 높게 나타남